

2015년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해설_김욱 교수님

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②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 ③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 ④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별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틀림. 법률에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통고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재량을 갖는다. ③ 틀림.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는 형사소추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③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판례는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②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 ④ 유로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범위반사향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판례).

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정답] ④

[해설] 판례에 의할 때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이다. 즉,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요건적 신고이다.

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 ③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해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에 의해야 하는 서면주의이다. 그러나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따라서 판례는 '이의신청서'라는 표제가 아니고 '행정심판청구서'라는 표제라 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진정서'라는 표제라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②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까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 ②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 ④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정답] ④

[해설]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해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 있는 처분이다(판례).

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 ㄴ.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ㄷ.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ㄹ.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ㅁ.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ㅅ.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ㅁ, ㅂ
- ③ ㄴ, ㄹ, ㅁ, ㅅ
- ④ ㄷ, ㅁ, ㅂ, ㅅ

[정답] ②

[해설] 판례에 의할 때 ㄴ, ㄹ, ㅅ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②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 ④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처분(예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을 후 행해진 그 처분(예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행위(예 압류 등의 체납처분)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1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현 실정법상 규범(헌법, 법령, 조약, 조례·규칙)의 공포는 인터넷과는 관련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③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④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그런데 계약(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③

[해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다(판례).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 ③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사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는 원칙적으로(=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①의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따

라서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은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이어서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② 틀림.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이것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즉,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틀림.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 여부에 대해 재량을 갖는다(多·判). ④ 틀림.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초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주체상의 하자)가 있고 따라서 원처분주의하에서도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8조제2항). 즉, 법령(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국가배상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② 틀림. 개인정보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틀림.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된다. ④ 틀림.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지방경찰청
-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 ③ 종로경찰서
- ④ 종로경찰서장

[정답] ④

[해설]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되는데 이때의 행정청은 처분의 명의행정청을 말한다. 즉,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구의 명의로(=이름으로) 처분이 행해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설문의 경우 내부위임이지만 위임청(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수임청(종로경찰서장)의 이름으로 처분이 행해졌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수임청(종로경찰서장)이 된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종로경찰서와 같은 행정관서는 소송의 당사자(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

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④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각목이 정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해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다.